

‘자연인 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 예우 박탈

尹 전 대통령 예우는

기념사업·비서관 지원 등 자격 잃어 전직 신분 ‘낮은 수준’ 경호는 유지 내란죄 재판시 ‘기동 경호’ 사라져 최장 10년 대통령경호처 보호 가능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지난 4일 파면된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의 경호는 받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

전직대통령 예우는 어디까지?

연남뉴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원 내용

윤석열전 대통령 해당 여부

연금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달하는 금액 지급	✗
유족연금	유족 중 배우자에게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70%에 달하는 금액 지급	✗
기념사업 지원	민간단체 등이 기념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가능	✗
국립묘지 안장	서거 시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경우 묘지 관리 인력·비용 지원	✗
보좌 인력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지원, 서거 시 배우자에게 비서관 1명·운전기사 1명 지원	✗
경호·경비	임기를 채운 경우: 대통령경호처 경호 10년 지원 및 필요한 경우 5년 연장,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 이관	✗
	중도 퇴임하는 경우: 대통령경호처 경호 5년 지원 및 필요한 경우 5년 연장,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 이관	○
기타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	✗

*전직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 시 박탈

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법원에

오가며 내란죄 혐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되지만, 경호 수

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지게 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나 법원에 출석할 때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고 운행하는 ‘기동 경호’가 제공됐지만, 전직 신분이 된 만큼 이러한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대통령경호처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호 대상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파면 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이 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이후에도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마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집권 초에는 일부 유투버들이 집회를 열고 소음을 유발하는 정도였으나 현재는 양 진영이 최대로 결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주시하며 긴장 중”이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연남뉴스

尹, 관저 머물러… 이번주 퇴거·서초동 사저 이동할 듯

제3의 장소 이동 가능성도 제기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인 6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는 일러야 이번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6개월가량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경호 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통령실, 현재 선고 직후 대통령 상징 ‘봉황기’ 내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된 봉황기가 내려갔다. 역대 대통령실에서 봉황기는 대통령을 상징해 왔다.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 선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은 약 19

분 후인 11시 41분께 대통령실에 설치된 봉황기를 내렸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대통령 기관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해 용산기지 소재 국방부 건물로 사용되던 본관 건물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했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안내문도 전날까지는 ‘대한민국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표기됐으나, 지난 5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연남뉴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산책하는 윤 대통령. 연남뉴스

승복 없는尹, 지지자에 “늘 여러분 곁 지키겠다”

탄핵 후 두 번째 메시지

“자유·주권 수호 위해 싸운 여정” 민주 “극렬지지층 선동…파면 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사흘째인 6일 지지자들을 향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 이후 두 번째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유와 주권수호의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을 봤다”며 “몸은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삭발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불법학 쉼인가”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국유세력에 대한 선동을 획책하고 나섰다. 파면 선고 후 첫 입장문보다 더 괴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현재가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을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했는데도 윤석열은 사죄의 의사가 없이 극우 세력을 선동한다”며 “현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조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재판을 앞두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내란수괴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한다”며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안위를 위해 나라가 결판나든 상관없이 극렬 지지층만 선동해 폭주를 이어갈 쉼인가”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낸 메시지는 용납 못할 선동으로, 내란 수괴를 재구속할 이유”라며 “법사위 간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